

대우조선 하청 노사, 협상 타결했지만... ‘손배 청구’는 과제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노조 파업과 관련한 노사 협상이 파업 51일째인 7월 22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날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사 대표 권수오(왼쪽 세 번째) 녹산기업 대표와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노조 파업과 관련한 사내하청 노사 협상이 파업 51일째인 7월 22일 극적인 타결을 맞이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협의회는 7월 15일부터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집중교섭에 들어갔고 교섭 8일째인 7월 22일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잠정합의안 도출 후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 찬반투표가 진행됐으며 찬반투표 결과 잠정합의안은 찬성 109표, 반대 9표(투표 참여 118명)로 최종 가결됐다.

극적 타결로 얻은 임금인상·고용승계

이번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노사 양측은 지난한 시간을 거쳤다. 맨 처음 협상의 쟁점이 된 것은 임금인상률이었다. 노조가 최초로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30%였으나, 회사가 제시한 수치인 4.5%를 노조가 받아들이며 임금인상률은 의견일치를 봤다.

그러나 협상 막판에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파업 과정에서 조합원 7명이 원유운반선을 잠거해 고공농성과 옥쇄농성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사측은 예상되는 잠정 피해액이 7000억 원이라며 원청과 별도로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노조는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말 것 요구하며 맞섰다. 또, 노조가 파업 기간 협력업체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조합원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면서 노사는 또다시 평행선을 달렸다.

이 가운데 정부의 압박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담화문 발표, 대통령 발언 등을 통해 이번 파업을 불법 잠거 행위로 규정하고, 불법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처음엔 노사 당사자 간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상황은 더욱 급박하게 흘러갔다. 잠거 농성이 이뤄지고 있는 옥포조선소 1도크에 경찰력이 배치되고, 경찰 헬기가 조선소 위를 날아다니기도 했다. 더불어 산업은행은 파업이 길어지면 대우조선해양이 회생절차 신청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점점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노사는 7월 22일 극적인 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다.

노사는 앞서 의견일치했던 임금인상 4.5%에 합의했다. 고용승계 문제는 협력업체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조합원들을 다른 협력업체에 고용승계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 문제는 노사 입장 차가 커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노조 측 교섭위원인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민형사상 면책 권리는 이후에도 진지하게 대화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가 임원이 아닌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합의는 노사가 사실상 협상 마지막 날인 오늘 어떻게든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사는 7월 23일부터 2주간 대우조선해양 여름휴가가 시작되기 때문에 기약 없는 파업 장기화를 막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나아가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도 있었다. 사실상 7월 22일이 협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던 셈이다.

홍 부위원장은 “노사가 여러 차례 정회를 거듭하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엄중한 현 사태를 종결시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교섭에 임했다”며 “다시는 이런 목숨을 건 절박한 투쟁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대우조선의 정상화와 대우조선 사내하청 저임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줄기차게 이어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수오 협력업체 협의회 회장은 “앞으로는 생산이 멈추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 상생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만드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과 조선산업 발전 위해 협력사들이 앞장서서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상 타결로 노조가 접거했던 옥포조선소 1도크는 복구와 함께 정상화된다. 특히, 1m³ 구조물 안에 스스로를 가둬 옥쇄파업을 진행했던 유최안 부지회장은 농성 해제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단됐던 조업 역시 대우조선해양 휴가가 끝나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 청구는 과제로

이번 협상 타결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노조 입장에서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남아 합의 자체는 큰 과제를 남겼다.

노조는 합의 짓지 못한 사내하청 손해배상 청구 문제뿐만 아니라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번 파업으로 대우조선해양은 8000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과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해당 협의에서 노동부의 중재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노동부는 “노조는 향후 협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 고용노동부도 협의에 참여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협의에 참여할 계획이 없

다”고 밝혔다.


한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계에서 잇따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동계에선 협상 결과에 아쉬움을 전하면서도 앞으로도 조선소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힘을 쓸 것을 밝혔다.

금속노조는 “조선하청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를 포함한 조선산업 원·하청 노사, 노동시민사회단체, 정당, 종교계 등에 범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며 “조선하청노동자의 처우개선은 원하청 노사관계에서만 해결되지 않으며, 전국 모든 조선하청노동자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이들의 고용과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야만 조선산업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비록 우리의 요구가 합의문에 다 담기지는 못했지만 51일의 투쟁 과정을 통해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실상 나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상을 세상에 다시 알렸고, 거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라는 지역의 울타리를 넘어 투쟁과 연대를 전국화시켰다”며 “마음에 남는 아쉬움을 자양분 삼아 더 큰 단결, 더 넓은 연대, 더 깊은 투쟁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가 산업현장에서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가 주요 쟁점에 합의하고 노조의 불법 행위가 중단된 것은 다행인 일이지만,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 근로자 그리고 지역경제의 커다란 피해는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앞으로 노조는 생산과 경영 정상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산업현장의 법치주의가 확립되길 바란다”며 “산업현장에서 투쟁적 노동운동과 불법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노사관계 개혁의 첫걸음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에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불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 향후에는 이 같은 불법 파업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정부도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산업현장에서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